

# 시작부터 진흙탕 싸움... “정치공세” vs “옹졸한 與”

〈민주당〉

〈한국당〉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민주당 “피고발인이 청문회... 비적절”  
한국 “윤 후보자에 충성... 안타까워”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고, 자유한국당은 “옹졸한 여당”이라고 비꼬며 사대질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공직자 자질·도덕성 검증 등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는 본격적인 청문회에 돌입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부터 윤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과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당한 12명 의원의 청문회 참석·진행 여부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먼저 한국당 김진태·이은재·주광덕 의원 등은 이 자리에서 윤 후보자가 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왼쪽부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개입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경우 윤 후보자의 병역면제 관련 부동시 진단 입증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오 의원이 제기한 부동산 문제만 일리가 있다”며 윤 전 서장 사건개입 의혹에 대한

한국당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 급급하면 황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윤 후보자는 당시 전혀 보고·결제·수사사안도 아니었다”고 옹호했다.

여야의 헐뜯기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불붙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개혁법안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일부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언급하며 “(피고소·피고발인) 기소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소환 조사받는 몇 분이 청문회 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과연 법에 따라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사항인지 국민이 말할 수도 있다”고 청문

회 제척을 거론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박 의원과 여당을 향해 “한국당을 걱정해줘서 감사하다”고 비꼬며 “피고발인이지만,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여당이 체면을 지킬 줄 알았는데, 여당치고는 옹졸한 여당이란 생각”이라며 “윤석열 짝사랑이 눈물겹다”고 맹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어 여당을 향해 “국회의원인지 청와대 직원인지, 검찰 직원인지 윤석열에게 충성을 보이는 게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고성엔 청문회 시작 한 시간 반 넘게 이어졌고, 여 위원장이 “후보자 자격 검증 시간에 동료 의원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큰소리 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제지에 나서면서 윤 후보자 자질검증 등은 정오가 돼야 들어갔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 국회, 日 수출규제 해결 위한 ‘방일단’ 파견

3당 원내대표 이견 없이 합의  
방북단 구체화, 추경 등 협상

국회가 이달 중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방일단을 파견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의정·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한민수 국회의장 대변인은 회동 후 “문 의장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제안했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견 없이 이달 중 초당적 국회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 결의안도 오는 18~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문 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3인은 이날 방일단 파견 논의와 함께 ▲국회 방북단 구체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법안 처리 ▲경제원탁토론회 구성 ▲북한 목선 국정감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 배분 ▲윤리위원회 재구성 등 6월 임시 국회 의사일정도 추가 협상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국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의장(왼쪽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방북단 구성은 문 의장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는 다음 의정주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방북단 추진 항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초월회’ 모임에서 ▲남북 국회회담 ▲한반도 비핵화 ▲대북인도적지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국회는 또 의정주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매주 월요일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과 관련해서 이번 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다만 추경 처리 최종 시한은 정하지 못했다. 국정감사도 민주당의 반대로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경제토론회는 15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불러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 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일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경제토론회에 대해 “언제쯤 어떻게 할지 (3당) 원내대표가 윤곽을 잡아달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치우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해법·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돼야 한다는 게 문 의장 설명이다.

/석대성 기자

## 국방부, 6·25 참전유공자에 명패 달아준다

각급 부대의 장성 및 대령급 지휘관이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배 군인들을 방문해 명패를 달아주며 감사를 표하게 된다.

국방부는 31일까지 지역 보훈지청과 협조하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전군(全軍)에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

업’에 군이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는 한국전쟁(6·25) 참전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행사 대상자는 한국전쟁 무공수훈자 및 참전유공자다.

각 부대 장성 및 대령급 지휘관 주관으로 책임지역 내 군 관련 국가유공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명패를 달아

드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 전우들에게 감사를 표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가 국가유공자에게는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장병들에게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값진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지난 1월부터 독립유공자(7,697명), 4월부터는 민주유공자(2,266명), 6월부터 국가유공자(205,820명)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돼 왔다.

/문형철 기자

## 한빛부대 장병 280여명 아프리카 파병

육군, 유엔 평화유지임무 수행

아프리카남수단에서 유엔(UN) 평화유지임무(PKO)를 수행하게 될 한빛부대 11진 장병들이 소중한 가족을 뒤로 하고 파병길에 올랐다.

육군은 8일 서울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국제평화지원단에서 환송식을 갖고 파병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1진 장병들 중 방성진 대위(29)는 4월에 예정됐던 결혼을 미루고 파병길에 올랐다. 이정연 대위(31)는 지난달 8일 결혼한 신혼이다.

1남3녀를 둔 장윤성 소령(37) 등 8명의 ‘다자녀 아빠’들도 사랑스런 자녀들과 가족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으며 파병 임무를 수행한다.

11진 장병들은 지난 5월 편성돼 8주



8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육군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린 한빛부대 11진 환송식에서 부대원들이 파병신고를 하고 있다.

간에 걸쳐 아프리카의 극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임무수행 훈련에 매진해 왔다. 개인과 부대 방호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상황조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민군 작전 수행을 위해 전문 특기교육은 물론, 아프리카 문화 이해와 언어 숙달 등 현지 적응력도 높였다. 환송식에는 파병 단장 최재영 대령을 비롯한 280여 명의 파병장병, 가족, 군 관계자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n@

## 사내 장례지원 후 사망 ‘업무상 재해’

법원 “과로가 질병 주원인과 겹쳐”

사내 장례지원 업무를 도와주다 과로 등으로 평소 앓던 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는 업무상 재해 인정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6년 2월말 부서원의 장인상이 생겨 사흘간 장례지원팀장을 맡아 일했다. 이후 A씨는 장례식 둘째 날부터 가슴 뻐근함과 기침, 소화불량,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에는 병원을 찾았다가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았고 사흘 뒤 심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과로가 아닌 맹장염 수술 때문에 기저질환이 악화한 것이라고 기각을 거절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족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망인의 발병 전 1주일의 근무시간은 66시간 48분으로, 통상의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넘게 증가했고 발병 3일 전부터는 평소에 하지 않던 장례지원 업무를 수행해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봤다.

/손현경 기자 son89@